



# 전주매일

##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 도내 6곳 모두 선정 쾌거

전주·군산·정읍·김제·임실·순창 등  
전북교육청-자치도-시·군 간 협업 결실  
지역 특성 토대 4대 전략·10대 과제 설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공모 결과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등 6개 시군이 모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1차 선정 지역으로는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등이 있다.

이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 이룬 결과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특구당 30억원에서 100억원 안팎으로 지원된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청 및 6개 시군과 함께 ‘머물고 싶은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으로 ‘지역 발전전략 연계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 지난 6월

28일 공모기획서를 제출했다.

전북의 교육발전특구 운영기획서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을 분석한 현황자료를 토대로 지역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지역 주도 공교육 혁신, 지역 정주형 전문인력 양성, 지역 교육 국제화 등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략별 10대 세부 과제도 설정했다.

10대 세부과제로 전북형 유보통합 기반 마련, 지역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혁신 학교 모델 구현,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대학 혁신, 지역산업 연계 일자리 창출, 국제화 교육 인프라 확대,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타지역과 차별화 된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도·시·군, 교육청, 대학, 기업 유관기관들과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를 구성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을 두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말하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는 것이 곧 전북자치도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교육을 펼쳐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거석 교육감은 “대담한 교육혁신으로 전북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을 안팎으로 이끌고 지방해 줄 인재를 양성해 ‘찾아오는 전북교육, 한국의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 협력 강화... 전북자치도, 활성화 위원회 개최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 공유  
도, 적극 지역제한 입찰 등 요청  
합리적 공정설계 반영도 당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했다. (관련사진 3면)

30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개발청 등 공공기관과 건설협회 등 민간 단체 20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기관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업체 수주 현황점검과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 공유하는 등 상호협력력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역업체 활용 수범사례로 H 공사는 A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입찰 공고시 지역업체 참여 30% 이상을 권고하고,

B 영농 편의 증진 사업 입찰에 지역건설업체 의무 참여 최대인 49%까지 참여토록 하였다.

또한, S 공사는 C 사업에 지역업체 30%, 하도급 60% 이상 참여토록 하여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를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대부분의 대규모 신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대 기준의 필수 적용, 공공사업 추진시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따른 분할발주 등 적극적인 지역제한 입찰, 입찰공고문에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구성할 수 있도록 권장 문구 삽입 등을 요청했다.

또한 고금리, 원자재 가격상승 등을 감안해 발주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을 자제하고, 파소 설계 관행이 없어도 되도록 합리적인 공정설계 반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광역단체 최초로 투자기업 공장신축 등에 있어 지역업체 활용 실적에 따라 추가보조금(5%)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 입주기업·지역건설협회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공공공사 대형건설 현장과 대형 건설사, 기업 분사 방문을 통한 현장세일즈 활동 등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들을 현장에 즉시 전파해 지역 건설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까지 지역업체 참여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무더운 여름, 북적이는 아이스스케이팅장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30일, 전주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아이스스케이팅을 즐기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세법개정안에 반영

김관영 도지사, 정부에 지속 요청...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 가업상속세 대폭 경감 가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특성이 효과를 발휘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을 영위하던 10년~30년의 기간에 따라 300억원~600억 원을 과세 액수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만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재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공제 한도도 제한 없이 적용받게 된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전주·익산·김제·정읍에 지정된 기회 발전 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모든 기업이 일정 요건 충족시 공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기회 발전 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

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오너들의 골칫거리인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건실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데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기업 영위 기간 축소, 지분 보유 요건 완화 등 무분별한 상속 공제에 대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안을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를 눈여겨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정부 세제 개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김 지사에 대한 지문을 별도로 지시할 만큼 세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수차례 건의해 왔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기회 발전 특구에 대한 한도 없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을 포함시키면서 김 지사의 건의를 수용했다.

한덕수 총리가 김 지사의 그간 적극적인 건의 활동에 대해 언급하며, 지

방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김 지사의 건의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끊임없이 논의한 결과 이번 세제개편안이 탄생하게 됐다. 이는 사전에 별도의 서신으로 알려줄 정도로 김 지사의 건의 활동은 인상적이었다는 후문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은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제도가 개편되면 이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투자 및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전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게 전북자치도의 판단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